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39호 2015년 8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5년 8월 발행(39호)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일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 권 두 사

Message



협회 창립30주년을 맞아,

친애하는 전문건설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 이 광 오 입니다.

금번 2015년은 우리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전문건설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각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반세기를 지내왔습니다. 과거의 국가건설산업 발전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과거의 영광만으로 미래의 국가건설산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이 새롭게 거듭나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건설인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여야 할 때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의 건설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현실입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산업보다 비중이 높고 지역경기 회복 효과가 여타 산업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 대신 해주진 않습니다.

올 가을에 열릴 30주년 행사의 제목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전문건설 창립 30주년 및 생존권 투쟁대회로 이어 30주년 기념식을 기점으로 중앙회와 각 시·도회가 구심점이 되어 다가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반세기 동안 종합건설 위주로 만들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중 일부를 개정하여 종합건설과 우리 전문건설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간 열악한 하도급 환경 속에서 주종관계가 마치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온 구조적인 시스템과 건설법령을 새롭게 혁신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마련과 지방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도 상세한 연구검토를 거쳐 정부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열악한 전문건설 현장의 실체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 대표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는 평균 300년을 주기로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화와 혁신이 있었으며 기관, 단체, 혹은 조합, 협회 같은 조직은 30년 단위로 새로운 변혁을 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이때 우리 전문건설인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쓸 절호의 기회입니다. 30주년 행사를 그냥 축배를 들고 생일잔치로 끝내기엔 우리 전문건설 회원사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전국의 전문건설 회원사들에게 최소한 생존의 열매가 돌아갈 수 있도록 30주년 행사를 전국 4만여 회원사의 「생존권 투쟁 대회」를 겸해서 우리의 위기를 정부에 알리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투쟁할 때입니다. 금번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 전문건설산업이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문건설 대표 여러분도 우리업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가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가 화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가건설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원소식

Information Center

##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활용방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FIRMS)”의 조합 보증심사 업무 활용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해외건설협회와 연세대학교,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시스템 구축내용에 관한 안내와 더불어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심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이와 관련, 「해외건설보증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별 문제점·효과·해결과제 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FIRMS를 활용하는 방안 등 해외보증 리스크관리 방안의 대안들을 모색하여 하반기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국제계약 및 국내계약에 의한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구로서, 필요한 경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위원장이 되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조달청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되는 정부위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 지난 8월 7일, 유일한 연구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초고층 빌딩 설계시공 기술 고도화 및 확산” 과제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세부과제별 연구타당성 검토 및 R&D 추진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동 과제는 '15년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신규과제로 추진예정인 과제로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09년부터 '13년까지 참여한 “초고층 빌딩 설계 기술 연구단 및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 연구단”의 후속과제이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 평가위원 위촉

- 우리 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5년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에 위촉되었다.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이번 평가단 활동에서 박광배 연구위원은 내년 1월까지 훈련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 국토진흥원, 주거환경연구사업 연구단과제 참여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올해 신규지원과제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단」 과제에 우리 연구원의 유일한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 동 과제는 총 연구기간이 5년 8개월로(15.07~21.03) 연구원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분당 등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유도과 전문공사 리모델링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정성호 의원실 방문,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성화 방안 의견 개진

- 지난 8월 11일,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실을 방문하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 국토교통부,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검토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노재화 원장과 홍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8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검토회의(제3차)에 참석해 핵심쟁점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의견을 재차 강조하였다.
- 우리 연구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는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발주자의 시공사 선택권 확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예산 절약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 최신 건설 정보

News & Issues

## 건설업 '2015 시공능력평가' 결과, 중견 주택건설업체 상승 돋보여

-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5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주)이 16조 7,267억 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2위는 현대건설(주)(12조 7,722억 원)로 지난해와 같고, 3위는 (주)대우건설(9조 6,706억 원)로 두 계단 상승하였으며, 4위는 한 계단 밀려난 (주)포스코건설(9조 426억 원), 5위는 GS건설(주)(7조 9,022억 원)이 차지하였다. 6위는 지난해 4위였던 대림산업(주), 7위와 8위는 지난해와 같이 롯데건설(주)과 에스케이건설(주), 9위는 작년에 현대엠코와 합병한 현대엔지니어링(주), 10위는 현대산업개발(주)이 작년에 13위에서 다시 "Top 10"에 진입하였다.
-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총액은 225.2조원으로 전년(212.7조원)보다 소폭 증가하였는데, 작년에 주택시장이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며 공사실적 증가 및 재무구조 개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시장의 회복으로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순위 상승이 작년보다 두드러졌는데, 중흥건설(주)('14. 52위 → '15. 39위), 한림건설(주)('14. 58위 → '15. 46위), (주)서한('14. 74위 → '15. 60위), (주)서령개발('14. 109위 → '15. 80위), (주)우남건설('14. 157위 → '15. 82위)등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 이번 시공능력평가 업체는 총 54,413개사로서 전체 건설업체 61,061개사의 89%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각 협회 홈페이지(대한건설협회 [www.cak.or.kr](http://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http://www.kosca.or.kr), 대한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http://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http://www.f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 〈 상세 개정내용 〉

- 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 : 10만㎡이상까지로 완화
-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음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 조합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개정내용 〉

-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 ⇒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 ⇒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 국토교통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09.03),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4.10.14),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05.29 공고)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국토부는 “금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하여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